

전북의 사회운동과 집합 기억의 양상*

- 1980년대 '항쟁'에 관한 의례와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

정호기**

이 글은 전북의 사회운동을 주체와 사건의 특성에 의거 구성하고, 의례와 기념시설을 통해 집합 기억의 양상을 고찰한다. 전북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를 대표하는 '항쟁'이며, 개헌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5·18과 6·10이다. 전북은 두 항쟁이 모두 발생한 지역이지만, 조영이 미흡했다. 주체와 사건의 특성으로 보면, 전북의 두 항쟁은 대비된다. 5·18은 학생이 주도했는데, 조직화와 체계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장소는 교정이었다. 5·18의 특성은 2명의 대학생 사망, 신흥고 학생 시위, 다수의 피해자 발생으로 정리된다. 반면, 전북의 6·10은 잘 조직된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생단체 등이 연대하여 전개했다. 5·18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6·10의 장소성은 거리와 광장에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집합 기억의 양상에 반영되었다. 5·18 의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추모와 계승을 의제로 촉발되었다. 5·18 의례는 당면한 사회운동과 중첩되면서 환기되었고, 제도화 이후에도 시민사회의 기억공동체가 작동했다. 5·18 기념시설의 핵심 자원은 설립 시기, 대상, 주제로 볼 때, 수십 년간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다가 2010년에 들어 여러 사건으로 확장되었다. 6·10 의례는 정치 집회로 몇 차례 개최되다가 문민정부 이후는 소규모 기념행사가 되었고, 2000년대에는 10년 주기 행사가 되었다. 6·10 기억공동체의 존재감은 희미한데, 이는 6·10 기념시설이 건립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전북이라는 사실과 상관적이다. 전북에서 6·10은 지역사회운동의 자산으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이다.

주제어: 사회운동, 집합 기억,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의례, 기념시설

* 이 글은 전북지역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 작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논평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글은 2022년 8월 26일 개최한 전북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1. 머리말

1979년과 1980년 그리고 1987년을 이해하고 성찰하는데 반드시 유념할 개념은 민주화와 민주주의이다. 이들 해에는 집합행동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중항쟁(이하 5·18), 6·10민주항쟁(이하 6·10)이 발생했다.¹⁾ 이처럼 집합행동에서 권위주의 통치 체제의 종식을 목표로 한 ‘항쟁’이 사건명에 포함된 경우는 흔치 않다. 이들 항쟁은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치권을 획득한 군부 혹은 신군부 세력을 극복 대상으로 삼았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민주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운동이 사회적 자산으로 재인식되면서 항쟁의 의미와 가치가 재고되었다. 이에 따라 기억과 기념 그리고 계승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민과 관 차원의 의례와 기념사업이 다양하게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5·18과 6·10은 전개 양상과 영향이 특별했으며, 전국에 걸쳐 지속해서 작용하여 위상이 남달랐다. 두 항쟁은 후속한 무수한 사회운동의 원인과 자원이 되었고, 사회 전반에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박호성 2005, 165~173). 두 항쟁에서는 여러 의제가 제기되었는데, 개헌과 밀접히 연관되었다. 5·18 이후 5개월 여만인 10월 22일 제8차 국민투표가, 6·10 이후 4개월 여만인 10월 27일 제9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던 배경에는 두 항쟁이 있었다.

5·18과 6·10은 발생원인, 전개 과정, 사회적 결과 등에서 차이점이 더 많았으나,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었다. 이를테면, ‘6·10으로 이어지는 투쟁은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규정되었고(서중석 외 2017, 15), ‘6·10의 뿌

1) 이들 사건의 호명은 다양하며, 그 나름의 의미와 성격,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항쟁’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하는데, 집합행동의 범주화를 고려한 것이다.

리는 1980년 5월 광주'라고 정의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9, 216). 6·10의 성과는 5·18의 의미와 공동체에 드리운 부정적 인식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하여 두 항쟁의 의미와 효과는 시간적 순서를 넘어 서로를 규정하고,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했다. 또한 두 항쟁은 '87년체제'라는 인식틀을 구축하는 기반이었다(김종엽 엮음 2009, 33~34).

두 항쟁이 전북에 미친 영향과 효과는 다방면이었고 광범위했다.²⁾ 두 항쟁의 직접적 배경이 된 지역은 광주·전남 이외에 전북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두 항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정도 등은 이들 지역 내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두 항쟁은 '전라도'라는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라도는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임과 동시에 정치·사회적 담론 효과 및 정체성을 공유하며, 그 중심부에 두 항쟁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에서 5·18과 6·10은 지역사회운동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전북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의 특성을 주체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의례와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집합 기억의 양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전북의 사회운동이라고 지칭한 것은 구체적으로 5·18과 6·10을 말한다. 이 글은 두 항쟁이 전북의 집합 기억에서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가를 역사적 흐름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할 것이다.

2) 「전북일보」, 2007. 5. 16. “도 단위 민주화운동 구심체 탄생.”

2. 연구 현황과 쟁점 그리고 방법

1) 기존 연구의 현황과 연구의 쟁점

5·18과 6·10은 1980년대 전북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평가된다.³⁾ 전북은 서울, 부산·마산, 대구, 광주 등과 같이 지역을 상징하는 사회운동을 예시하기가 난해하다. 그렇기는 하나 전북에서 두 항쟁의 의미와 위상은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두 항쟁의 참여자들은 1980년대 이후 전북 사회운동과 사회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비중이 큰 정치적 인물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북에서 일어난 사회운동 가운데 두 항쟁은 현재도 우선해서 고려된다(전주시 2022).

그렇다면 두 항쟁의 연구와 학술적 성과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북의 5·18은 2000년대에 들어서 정리되기 시작했다.⁴⁾ 연구 성과물은 2010년대 중반에 생산된 것부터 확인된다. 가장 빠른 성과물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2012)으로 출간된 『전북민주화운동사』에서 하나의 장으로 정리한 것이다.⁵⁾ 전북의 5·18이 학술적으로 조명된 시점은 2020년대에 들어서였다. 노영기의 글(2021)이 그것인데, 출판물로는 아직 공식 공개되지 않았다.⁶⁾ 이 글은 기존의

3) 1980년대 학생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에 참여했던 오○○는 “광주와 6월항쟁으로부터 오는 그 자장이 결국 지금 30년이 지나도 저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증언했다. (2017. 7. 19. 박종훈 면담)

4) 초창기의 작업 성과는 김수돈이 2003년 「전민일보」에 10회 연재한 기획 기사다. 다음으로는 이상호의 책(2007)인데, 자신의 활동을 회고한 것이다.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는 <<제1차 1980년 5월 전북지역 운동사 구술자료집>>을 비공식적으로 제작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18기념재단이 지원하여 중요 관련자의 구술면담이 이루어졌다.

5) 이 부분을 정리한 저자는 2014년 6월 10일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5·18이 전북지역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과 특성’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6) 이 글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전북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을 수록한 『전라도 천년사』는 출판이 지연되고 있다.

구술 채록, 신문 기사, 군 기록물 등을 활용해 5·18 국면에 전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리했다. 전북의 5·18에 관한 첫 논문은 김정원의 글(2022)이었다. 이 글은 1998년 피해보상에서 5·18 사망자로 결정되었던 전북대 학생 이세종을 사례로 기억투쟁의 전개와 특성을 규명했다. 이 글은 이세종이 전북의 5·18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했는데, 그 밖의 5·18의 기억투쟁은 다루지 못했다.

전북의 6·10에 관한 조명과 연구는 더욱 미진하여 자료 수집과 사건 전개를 정리한 정도이다. 제20주년을 기념해 전국을 포괄하여 정리한 『6월항쟁을 기록하다』 4권의 일부로 전북이 다뤄진 게 처음이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전북민주화운동사』의 한 장으로 다루어졌다. 전북의 6·10을 다룬 두 편의 글은 1980년대 전반기 유화 국면이 형성되면서 민주화의 흐름과 활동이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왜 6·10이 그 흐름의 정점을 이루었는가, 전북의 6·10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한편 전북의 6·10 관련자 구술면담은 2017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을 받아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주제는 전북의 6·10이었으나, 사회운동에 투신한 시점부터 1980년대까지를, 인물에 따라서는 2000년대 이후 활동도 수집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은 두 항쟁의 원초적 사건이 발생한 일련의 정황과 이에 관한 집합 기억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구분해서 접근하려 한다. 이 글은 원초적 사건을 고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띠었게 되었는가를 역행 추론해서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원초적 사건의 차이 및 특성과 집합 기억의 관계를, 집합 기억의 차이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가를 파악하려고 한다.

사회운동의 집합 기억은 두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첫째, 집합 기억의 형성과 지속 그리고 의미의 공유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

식인 의례다. 의례의 개최는 주기성과 계기성을 통해 원초적 사건의 회상과 현재화를 모색하는 집합 기억의 대표적인 방식이다(정근식 2006, 80~83). 사회운동의 의례는 원초적 사건에 대한 현재의 평가와 연동되어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성격으로 재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집합 기억의 주체 형성과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의례를 위해서는 원초적 사건들에서 필요한 자원을 선별하고, 현재의 혹은 미래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집합 기억의 상시화와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시설이다. 사회운동을 주제로 하는 기념시설은 여러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질 때 등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시설은 기억공동체가 체계를 갖추고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실체화된다. 그래서 기념시설은 기억공동체의 형성과 결속력을 반영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기념시설은 원초적 자원에서 도출한 서사와 의미, 상징 등 역사와 문화적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항쟁에 관한 집합 기억이 명시적으로 드러내려는 함의를 재현한다.

2) 연구 방법과 자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북의 5·18과 6·10에 관한 정리와 연구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고찰과 평가가 부족하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려면, 더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데,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분석하는데 난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의 5·18이라는 사건적·심리적 장벽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전북의 6·10을 특화하고 명쾌하게 드러내기가 간단하

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근래에 들어 지역 차원에서 이에 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었으므로 조만간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⁷⁾

이 글은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2012), 『전북민주화운동사』과 『6월항쟁을 기록하다』 4권에서 해당 부분을 참고해 항쟁의 구조와 전개, 변화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기존 구술면담 산출물과 신문 보도를 활용해 문제의식을 접목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5·18은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2008)가 발간한 《제1차 1980년 5월 전북지역 운동사 구술사료집》과 5·18기념재단 구술면담 산출물의 일부를 검토했고, 6·10은 《6·10민주항쟁 전북지역 구술사업》 산출물을 활용했다. 이들 자료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구술면담 산출물이 진실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문자료는 중앙지로는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를, 지방지로는 『전북일보』와 『전북대신문』을 검색했다. 신문자료는 전북의 5·18과 6·10에 관한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전북일보」는 6·10 제20주년을 맞아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2007년 6~8월에 “전북의 6월항쟁”을 연재했다. 이 기사는 전반적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북에서 건립된 5·18과 6·10 관련 기념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관련 인사들에게 확인과 검증을 요청하고, 보완하기를 반복했다. 현장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기념시설이나 사라진 기념시설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발행된 책자나 문서 자료에서

7)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2022년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과 「전북권 민주화기록관 건립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2023년에 「민주화운동 사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수행했다.

확인했다.

3. 항쟁의 주체와 사건의 특성

1) 5·18 : 학생 주도의 항쟁과 국면별 피해자 발생

민주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는 요구와 활동은 1979년 11월부터 1980년 5월까지 여러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규모 집단을 형성해 이를 주도한 세력은 대학생이었다. 대학가에서는 학원의 민주화와 권리 복원을 주요 의제로 집합행동이 분출했다. 민주화 열기는 1980년 3월 개학과 더불어 팽창했고, 정치와 사회 민주화로 의제를 넓혀갔다. 이 시기의 집합행동은 1970년대와 달리 대중운동의 양상을 띠었고, 주체와 참여자의 성격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기, 즉 긴급조치 9호 시대에 전북의 사회운동은 종교 관련 단체와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12, 97~119).⁸⁾ 기독교 및 천주교와 연계된 재야인사, 대학생, 청년 등이 사회운동의 중심축이었다. 대학에서는 소그룹 및 비공개 위주의 활동이 전개되어 대중적 리더십을 획득하지는 못했고, 사회운동 참여자는 사건과 연계되어 드러나면 즉시 학교 밖으로 방출되거나 주시를 받았다. 이런 양상은 1980년에 들어서 반전되었다. 1월 말경 1970년대 제적생 복학 결정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⁹⁾ 전북은 많은 제적생이 종교 기반의

8) 「전북대신문」, 1985. 4. 22. “70년대 후반기 전북학생운동사 1.” 「전북대신문」, 1985. 5. 13. “70년대 후반기 전북학생운동사 2.”

9) 전국 대학들은 1980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제적생 복학을 결정했다. 「동아일보」, 1980. 1. 23. “각 대학 제적생 복학 결정.”

운동에 연계되어 있었다. 수적으로 보면, 전북대가 다수를 점했고, 원광대도 일부 존재했다. 제적생이 발생하지 않은 대학들에서도 교회 등 종교 기관과 단체를 매개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요인들이 대학생 참여와 동원에 활용되어 신속하게 대중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주요 주체들이 공개 영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1980년 2~6월 전북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항쟁 주체와 양상이 국면별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1980년 2월에서 5·18이 발발하기 이전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들과 유사하게 5월 중반 기까지 전북의 사회운동은 대학생이 주도했다. 대학생 중심의 사회운동 세력은 이원화되어 있었다. 우선 '복학' 절차를 밟아 대학으로 복귀한 이른바 복학생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대학 동아리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전북대에서는 복학생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서클연합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여학생협의회와 과대표협의회는 개학하고 조직되었다. 이들 모임을 총괄하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는 3월 28일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복학생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공개적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 민주화 의제로 관심을 환기했다.¹⁰⁾ 다른 그룹은 총학생회를 구성한 세력이었다.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는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제반 절차를 주관했으나, 4월 15일 총학생회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¹¹⁾ 따라서 복학생대책위원회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가 총학생회를 매개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원광대는 인적·조직적 기반이 더 취약한 상태였으나, 유사한 경로로 세력을 규합해 갔다. 즉, 원광대도 종교에 기반한 운동에 관련된 복학생이 중심이 되었고 서클연합회를 구심으로 힘을 모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

10) 「전북대신문」, 1980. 4. 11. “복적생 방담 ‘우리는 또다시 만나고 있다.’”

11) 이런 일은 전북대뿐만 아니라 경북대, 충북대 등에서도 발생했다.

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원광대에서도 총학생회 부활이 추진되었다. 4월 28일 총학생회 선거가 개최되었는데, 역시 복학생 그룹과 결을 달리하는 그룹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그밖에 전주대와 군산대, 한일신학교에서도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총학생회 혹은 학생회를 출범했다.¹²⁾ 이들 대학은 총학생회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어서 5월에 들어 형태와 체계를 점차 갖추는 형국이었다.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와 총학생회가 전북의 여러 대학에서 결성되었지만, 전북대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북대는 총학생회 지도부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의 관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¹³⁾ 그런데 전북대 학생단체 간 협력과 연대의 소원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곧 일어났다. 총학생회장단이 4월 25일 취임¹⁴⁾했는데, 5월 2일 대규모 시위를 전개¹⁵⁾한 뒤부터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비롯해 간부 7명이 병문안을 갔다 경찰에 연행되었고, 파출소, 경찰서, 보안대, 제35사단 영창 등을 전전하며 조사를 받다가 5월 15일경 광주시 상무대 영창에 감금되어 있었다.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예비검속 지침이 하달되기 이전에 총학생회 집행부가 대규모로 연행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이례적이었다.¹⁶⁾ 그래서 전북대는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로 주도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대학생은 학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다가 결집력이 높아지면 거리로 진출했다. 전주에서는 5월 2일 전북대 학생들이 주도해 전북도청(현

12) 전주대와 군산대에서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세력이 같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3) 《제1차 1980년 5월 전북지역 운동사 구술사료집》에서 ○○○(당시 전북대 3학년)은 “학생회와 자율화추진위원회와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지. 가끔 내가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었고.”라고 증언했다. 반면, 당시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꾸준히 대화를 나눈 건 있었죠.”라고 증언했다.

14) 「전북대신문」, 1980. 4. 25. “총학생회장단 취임식.”

15) 「경향신문」, 1980. 5. 2. “전북대생 천명 경찰과 대치중.”

16) 원광대는 5월 8~11일의 시위로 양대 세력 중심인물들이 연행된 상태에서 5·18을 맞았다.

전라감영)과 전주역(현 전주시청)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14~15일에도 전북대 학생들을 필두로 전북도청과 전주역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전주대 학생들은 15일 도심 시위에 합류했다. 원광대 학생들은 5월 8일 이리역 광장까지, 14~15일 이리경찰서 앞 등에 진출했다. 군산에서는 5월 15일 시청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

전북대 학생들은 총학생회장단 연행에 항의하며 6일부터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농성장에서 시국을 주제로 토론하며 집단의식을 고양했고, 집회와 시위를 준비했다. 경찰이 5월 14일 도심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것은 학생들을 크게 자극했다. 그래서 학생회관 농성자가 늘었고, 농성장을 도서관까지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농성자들이 제대로 조직화 되고, 지도부가 적절한 방안과 방침을 확립한 것은 아니었다. 계엄 당국은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주요 사회운동가들을 예비 검속하기 시작했다. 전북대의 검거 대상은 앞서 연행되지 않은 학생회 임원, 농성과 도심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같은 작전이 전개되었지만, 대상자의 규모는 차이가 컸다(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2008, 27).

두 번째 국면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즉 광주·전남에서 5·18이 절정을 이루던 기간이었다. 전북에서는 항쟁을 추동할 구심이 해체 혹은 해산한 상태였으며, 시민의 저항이 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18~19일 전주 시내에 대자보가 부착되고 시위가 시도되었다. 그보다 한 걸음 나아간 항거는 22~24일 여러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전북 외 지역으로 유인물을 운송·배포하려다 검문에서 발각되어 좌절된 것이었다. 김제 성지야학 교사들이 25일 인쇄한 유인물도 운반 도중 발각되어 배포되지 않았다. 대학생이 주도한 전북의 5·18은 사실상 이렇게 종료되었다.

한편 22일부터 일련의 상황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직자와 조직, 연

결망이 중요하게 가동되었다. 기독교에서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역할이 컸고, 천주교에서는 전주교구 몇몇 신부들이 중심이 되었다(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2008, 20~21; 5·18기념재단 2013, 305~314). 그런데 이 국면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농성하던 2학년 이세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었다. 이세종의 죽음과 진상은 한동안 묻혔다가 유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기억투쟁의 장으로 나왔다(김정원 2022). 다른 하나는 원광대 4학년 임균수의 죽음이었다. 임균수는 휴교령에 따라 광주시로 귀향했고, 5월 21일 금남로 1가 Y다실 앞에서 총탄에 사망했다.

세 번째 국면은 계엄군이 광주의 전남도청 시민군을 학살하던 5월 27일부터 6월까지였다. 이 국면에 전북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집합행동이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집단은 고등학생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5월 27일 오전 전주신흥고등학교(이하 신흥고)에서 발생한 시위였다.¹⁷⁾ 신흥고 학생들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연결망을 적극 활용했다. 신흥고는 광주·전남 출신 학생이 많아서 상황 전파가 빨랐고, 정보가 풍부했다(전주신흥고등학교 역사편찬실 2024, 365). 이는 광주의 소식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경로였고, 항쟁 의지를 다지고 참여자를 결속시켰다. 계엄 당국은 신흥고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으나, 계엄령이 내려진 엄중한 시국에 고등학생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웠다. 군과 경찰은 27일 아침 신흥고 일대에 병력과 최루가스 살포 차량을 배치했다. 신흥고 학생들은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지만, 경찰력과 제35사단 병력의 경계 속에 교사와 학부모 등의 만류로 교내 시위를 벌였다(5·18기념재단 2023, 254).

신흥고 시위는 5월 18일 이후 전북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항거

17) 신흥고에서는 이 일을 '5·27신흥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다.

였으며, 고등학생이 집단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강렬했다.¹⁸⁾ 주요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은 면했으나, 학사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이 일로 학업과 인생이 험로에 접어든 이가 적지 않았다. 몇몇 교사도 교단에서 축출되었고, 다수의 관련자가 고초를 겪고 처벌받았다. 청소년이 5·18에 참여한 것은 사진, 공공 기록물, 증언 등에서 확인되지만, 이처럼 많은 징계자가 한 학교에서 나온 사례는 신흥고가 유일했다.¹⁹⁾ 광주·전남의 경계를 넘어 전북으로 시위가 확산한 점, 전남도청 일대의 상황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점, 고등학생이 주도한 시위라는 점 등에서 주시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둘째, 신흥고의 항거는 5월 27일 시위로 끝나지 않고, 7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신흥고 학생들과 전북대 사대부고 학생이 탐을 이루어 그해 5·18의 진상을 알리는 벽서 작업과 유인물 배포 작업을 한 것이다(5·18기념재단 2023, 264). 5·18 이후에 개인이 분신 등의 방법으로 항거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렇듯 고등학생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벽서 작업과 유인물 배포를 진행한 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전북대 학생들이 6월 24일 휴교 조치가 풀린 첫날 침묵시위를 벌여 11명이 연행되었다.

18) 신흥고에는 ‘계엄령 통치 아래서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고립된 광주권 밖의 국민들에게 알린 최초의 자발적이고 조직인 항쟁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들이 신군부의 독재와 광주 만행에 정면으로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정리한 기념비가 있다. 이상 「오일칠정을 세운 뜻」(2012년 5월 27일 신흥고등학교 81회 동기 일동)의 일부.

19) 5월 19일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했지만, 학사징계는 없었다. 5월 22일 전남 강진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읍내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2) 6·10 : 학생과 시민의 조직적인 항쟁과 절반의 승리

전북의 6·10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활동력이 성숙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전북의 6·10을 조직하고 확산하는데 구심을 이룬 단체는 ‘전라북도민주화운동협의회’(이하 전북민협)였다. 전북민협은 1984년 10월 11일 전주가톨릭센터에서 결성되었다. 전북민협은 ‘오송회 사건’(1982. 11. 25.)으로 탄압 강도가 절정을 이룬 뒤 유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조직체였다.

초대 의장과 부의장의 직업 혹은 소속이 보여주듯이,²⁰⁾ 전북민협은 종교영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이광철 2023, 40~42). 전북민협은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1980년 5월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운동으로 탄압을 받은 경험자들이 중심축을 이루었다. 대외적인 지표로 보면, 전북민협은 1985년에 들어서 가톨릭의 영향력이 확장되었고,²¹⁾ 1986년에는 개헌 운동을 매개로 신민당과 민주협 등 야당 및 재야 세력과 연대했다. 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전신인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전북위원회’가 1987년 5월 21일 결성되었을 때, 전북민협이 근간이었다.²²⁾ 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구성을 보면,²³⁾ 종교인의 참여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10 당시 전북의 사회운동 기반과 역량이 종교영역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구심과 연대

20) 전북민협 초대 의장은 김제 제월교회 전병생 준목, 부의장은 전주 효자동교회 백남운 목사, 가톨릭노동사목 박순이 간사였다.

21) 전북민협 제2대 공동의장은 문규현 신부와 선진영 목사였다.

22) 전북에서는 1986년 4월 3일 ‘전북민주헌법쟁취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북민협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이 단체는 1987년 국민운동본부 결성의 초석이 되었다. 공동위원장 은 문정현 신부와 김경섭 목사였고, 은명기 목사도 함께했다(이재규 2007, 308).

23) 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참여단체는 전북민협, 인권선교협의회, 예장전북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전북정의실천성직자협의회, 남원지역 정의실천협의회, 전주교구 근로자의 집, 전북가톨릭농민회, 전북기독교농민회, 전북기청협, 전북문화운동단체연합, 전북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가톨릭대학생 전북연합회, 민현연 전북지부, 민주신약회 전북지부, 민주협 전북지부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7, 247).

관계는 6·10 이후 한층 공고화하고 있었다.²⁴⁾

전북의 6·10은 급성장하던 대학생 운동도 중요한 주체였다. 대학생은 6·10을 추동하고 시민 항거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대학의 상황에 따라 학생운동 조직화와 활동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1986년에 이르면 학생회 활동을 대부분 좌우하고 있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세력화되었다. 학생회 등 학생단체가 성장할수록 학교 당국과 파열음도 커졌다. 대학생 운동은 1987년에 들어서면 더욱 성장했다. 1987년대 전반기 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가 핵심 의제였으나, 박종철 사망(1. 14.)과 4·13호헌조치 발표 등을 계기로 정치 민주화 의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시되었다. 하지만 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사건은 경찰이 5월 15일 전북대로 진입하여 학원 민주화를 의제로 농성 중인 학생을 대거 연행하고 학생 자치 시설을 훼손한 일이었다.²⁵⁾ 이런 상황을 겪으며 축적된 역량으로 6월 25일 ‘전북지역학생협의회’(이하 전학협)를 결성했다.

전북의 6·10에서 도심 항거는 종교시설이 거점이 되었고, 종교인의 헌신과 참여가 돋보였다. 이런 현상은 1986년 5월 해방제(5. 20~23.)의 준비 장소로 전주가톨릭센터가 활용되었다는 점이 말해주듯이, 연속된 과정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 박종철을 추모하기 위한 집합행동이 표출되면서 한층 심화가 되었다. 이를테면, 고 박종철의 49재였던 3월 3일을 맞아 준비한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대행진’의 추도회 장소는 전주 성광교회, 익산 주현동성당, 군산 오룡동성당이였다. 이때부터 6·10이 마무리 될 때까지 종교시설은 전두환 정부의 반인권적 비민주적 통치 행위를 규탄하고,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항거 장소로 활용되었다. 특히 전주가톨릭센터는 3월 9일과 4월 24일부터 신부들이 단식농성을 전개한 장소였

24) 「전북일보」, 2007. 6. 7. “[전북의 6월항쟁 그 20년의 기록] 항쟁의 무대서 삶의 무대로.”

25) 「전북일보」, 2007. 5. 16. “도 단위 민주화운동 구심체 탄생.”

고, 6·10에서는 집회와 시위 준비와 도피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전주 중앙성당과 전동성당, 익산 창인동성당, 군산 월명동성당이 항거의 중요 거점이었다.

목회자들은 교계를 중심으로 항거를 조직했는데, 5월 18일 남원에서 개최된 시국 성명 발표와 단식을 일례로 들 수 있다. 6·10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지역별로 교회가 항거 장소로 활용되었다. 전주는 중부교회가, 익산은 중앙교회가, 군산은 성광교회가 집회와 행사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6·10 참여자의 규모가 확대된 이후는 도심의 주요 도로와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항거가 펼쳐졌다. 이를테면 전주에서는 경원동 소재 시청사거리 인근의 조흥은행(현 미래에셋증권) 일대, 관통로(충경로) 사거리, 전주코아코아백화점(현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일대, 서중로터리(현 진북광장교차로) 등이었다. 군산은 명산사거리 일대, 시청 인근, 미원동 소재 군산역 등이, 익산은 익산역과 중앙동 일대, 시청 일대 등이 항쟁의 주요 장소였다.

전북의 6·10은 동학농민혁명 이래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항쟁이었다. 따라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연행자가 생겨났다. 그렇지만 여론의 시선을 끌었던 사망자를 비롯해 심각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도 항쟁 과정에 혹은 6월 29일 선언 직후에 석방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전북의 6·10을 매개로 한 집합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

4. 항쟁의 집합 기억 : 의례와 기념시설

1) 항쟁의 집합 기억과 의례

항쟁에 관한 집합 기억은 정부의 지향에 따라서, 같은 정부에서도 시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기의 의례는 사회운동과 중첩되었고, 대체로 저항 의례 성격을 띠었다. 통치 세력이 항쟁 원인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폄훼할수록 저항 의례의 양상이 뚜렷했다. 일반적으로 5·18 의례는 1990년대 중반기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북에서 5·18 의례가 언론(「전북일보」)에 처음 기사화된 시점은 1984년이였다. 이전에도 5·18 의례가 이루어졌으나,²⁶⁾ 언론에서 기사화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때부터였다. 언론이 다룬 의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5·18 의례의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전북대 학생 60여 명은 1984년 5월 17일 이세종 추모제를 갖고 분향소가 설치된 제1 학생회관에서 교문 앞을 걸쳐 농대까지 1시간 10분 동안 침묵 행진을 벌였다.²⁷⁾ 1985년에는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학생이 5월 17일 학교별로 의례를 개최했다. 총학생회 부활과 더불어 학생운동이 급성장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5·18 의례의 양상도 학내 집회와 시위는 투석전을 동반했고, 전북대와 전주대 학생은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²⁸⁾ 특히 전북대는 한 주를 ‘5·18 기념제’라고 명명하고,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으며, 이세종 추모비를 건립

26) 이를테면, 1983년 5월 전북대 학생회관 뒤편에서 이세종의 첫 추모제가 개최되었다. 「한겨레」, 2020. 5. 18. “‘5·18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안내판 세운다.” 「전북대신문」도 이 일을 기사로 다루지 못했다.

27) 「전북일보」, 1984. 5. 18. “전북대 60명 침묵행진.”

28) 「전북일보」, 1985. 5. 18. “도내 5개대 시위.”

했다.²⁹⁾ 원광대에서는 5월 20일 ‘광주사태 진상규명 토론회’가 열렸고, 학생들이 정문 진출을 시도하며 화염병을 투척했다.³⁰⁾ 1986년에는 더욱 격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5월 20~21일 원광대 학생회관에서 ‘신용골 5월행사’ 준비 물품 183점을 압수했다. 5월 20일 전북대에서 ‘반제 반파쇼투쟁 호남지역 학생연합공동투쟁대회’가 개최되었다.³¹⁾ 한편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는 5월 20~23일을 ‘5월 해방제’라고 명명하고, 전주가 톨릭센터에서 당국과 대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08).

1987년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집합행동에서 5·18이 중심 의제가 되었다. 5·18은 학생과 시민의 사회운동 참여를 촉진했으며, 응집력을 높였다. 이 시기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요인에는 5·18이 있었다. 여기에 4·13호헌 반대 투쟁을 비롯해 학원 민주화 등의 쟁점과 연계되어 5·18 의례가 전개된 점도 상승 작용했다. 5월 18일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학생은 각각 ‘5·18추모제’를 개최하고 시위를 벌였다.³²⁾

노태우 정부가 5·18에 전환적 입장을 표방했던 1988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5월 17일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한일신학교 등에서 ‘광주항쟁투쟁기간 선포식’을 갖는 등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고, 도심 시위로 이어졌다.³³⁾ 저항 의례는 18일에도 7개 대학에서 전개되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도 ‘광주민중항쟁투쟁계승기간’을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가 도심에 집합행동의 장을 조성하면, 대학생이 합류했고, 당국과 충돌은 예정된 일이었다.³⁴⁾ ‘고 조성만

29) 「전북대신문」, 1985. 5. 20. “5·18, 5주년 활기 띠었던 한주.”

30) 「전북일보」, 1985. 5. 21. “원대생들 교내 시위.”

31) 「전북일보」, 1986. 5. 21. “원광대 학생회관 수색 1백 83점 압수.” “전북대 교내 시위.”

32) 「전북일보」, 1987. 5. 19. “도내 3개대생 5·18 추모시위.”

33) 「전북일보」, 1988. 5. 18. “도내 7개대 시위.”

34) 「전북일보」, 1988. 5. 19. “도내 7개 대학생 밤늦게까지 시위.”

군 민주국민장 전북지역장례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대응한 점과 정읍 출신의 단국대 최덕수 학생이 18일 분신하여 위중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후 광주청문회 개최와 피해보상 약속 등을 계기로 탄압 일변도의 방침이 축소되었고, 5·18 의례는 정부가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는 행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5·18 의례 방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1989년 5월 16일 전북대 학생 1,500여 명은 '5·18광주항쟁계승 및 노태우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갖고, 거리 시위를 벌였다.³⁵⁾ 5월 17일에는 11개 대학 학생과 전북민협을 비롯한 재야단체 등이 학내와 도심에서 5·18을 의제로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³⁶⁾

전북의 5·18 의례는 1990년대 중반기에도 저항 의례로 표출되었으나, 빈도는 급감했다. 전북대에서 1997년 5월 14일 5·18을 의제로 화염병 시위가 전개되고, 16일 정신 계승을 의제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³⁷⁾ 저항 의례의 막바지로 보인다. 왜냐하면 1998년부터는 이와 같은 저항 의례가 더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과 전북의 사회운동 진영이 직면한 심각한 내적 문제가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³⁸⁾ 전북의 5·18 의례는 공식적으로 재평가되고 공적 지원과 후원을 받는 행사가 되면서 문화적 기억과 이벤트성이 확대되었다. 5·18 의례는 2000년이 전환점이 확실했다. 전북에서는 그해에 민관합동 기념식이 처음으로 열렸다.³⁹⁾ 행정자치부가 1997년부터 기념식을 주관하고, 지역별 기념식 개최를 공식화했으나,⁴⁰⁾ 전북은 2000년에 들어 실

35) 「전북일보」, 1989. 5. 17. “전북대생 1천여 명 도심 곳곳서 시위.”

36) 「전북일보」, 1989. 5. 18. “도내 대학도 기념집회, 재야단체 회원들과 연합 가두시위.”
「전북일보」, 1989. 5. 19. “도내 11개대서도 집회.”

37) 「전북대신문」, 1997. 5. 19. “5·18 정신 계승 결의대회 열려.”

38) 이러한 변화는 당시 전북의 학생운동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김의수(2002)를 참조 바란다.

39) 「전북일보」, 2000. 5. 19. “5·18 20주년 기념식 성대히 거행.”

40) 「한겨레」, 1999. 5. 18. “5·18 벌써 잊었나 ….”

행한 것이다. 대학의 5·18 의례도 문화행사와 참배 중심의 기억 방식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를테면, 전북대의 주요 프로그램은 사진전, 영화제, 망월묘지 참배, 이세종 열사 추모식, 기념식과 공연이었다. 원광대는 위령제와 5·18 마라톤 대회를, 우석대는 사진전과 비디오 상영 그리고 망월묘지 참배를, 전주대는 기획 전시회와 사진전 그리고 영화 상영, 기념식과 문화제를 열었다.⁴¹⁾

〈표 1〉 2022년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 전북행사 프로그램

행사일	행사명	장소	내용	기타
5. 14.	5·18 청소년 가요제	노송광장		제4회
5. 16.~6. 30.	5·18기념 사진전	전북대 박물관	이세종 유품 등	
5. 17.	이세종열사 추모식	전북대 추모비	이세종 관련	
5. 17.	5·18민중항쟁 기념식	전북대 추모비		
5. 17.	이세종 장학금 수여식	전라고	이세종 관련	추모식
5. 18.	시민 참배단 운영	광주시	묘지 참배 등	
5. 20.	5·18기념 학술제	전북대 박물관	이세종 관련	
5. 21.	임균수열사 추모식	원광대 추모비	임균수 관련	
5. 26.	다큐시사회(5·27투쟁)	신흥고	신흥고 항거	

전북의 5·18 의례는 몇몇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되어 갔다. 전북 전체로 보면, 기념식, 시민 참배단 모집과 운영 그리고 전시회와 영상 상영회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북대와 원광대 그리고 전라고에서는 이세종과 임균수 추모행사가 열렸고, 신흥고 등 고등학교에서는 기념 행사와 열사 추모행사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신 계승을 위한 전북도민결의대회⁴²⁾나 문화제, 추모의 밤 등은 정세에 따라 나타났다. 광주의 행사위원회는 2000년대에 들어 ‘5·18의 전국화’를 위해 다른 지역 의례에 예산 등을 지원했는데(정근식 2006, 89), 전북은 자생력이 있다

41) 「전북일보」, 2000. 5. 17. “도내 대학 5·18 20주년 행사 다채.”

42) 2004년 5월 15일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5월정신계승, 이라크 파병철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북도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북일보」, 2004. 5. 15. “5·18 기념행사 다채.”

고 보고 지원하지 않았다. 전북에서는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 혹은 행사위원회⁴³⁾가 구성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전북에서는 2022년 5월 14~26일 제42주년 5·18을 기념하는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은 전북의 5·18 의례가 인물과 사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프로그램 개최 장소는 전북대가 4건이고, 그 외 4개 장소가 각 1건씩이었다. 인물은 이세종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이세종을 5·18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 맞닿아 있다.⁴⁴⁾ 5·18 의례의 초점이 인물에 맞춰지면서 학교를 매개로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이는 전북의 5·18 기억 공동체가 갖는 특성의 일면이기도 했다. 한편, 도심 행사로는 제4회 5·18 청소년 가요제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펼쳐졌다. 노송광장은 1980년 5월 시위 장소였다는 점에서 현장 연계성이 컸으나, 이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⁴⁵⁾

대비적으로 전북의 6·10 의례는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6·10의 주요 주체였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은 1988년에는 통일운동에 집중했다. 특히 대학생은 1주년이던 날 ‘6·10남북학생회담’ 성사에 전력을 하고 있었다. 이날 전북대, 원광대, 전주교대, 한일장신대 등의 학생이 교정과 거리에서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했는데, 6·10 의례는 없었다.⁴⁶⁾ 1989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⁴⁷⁾ 통일운동을 비롯해 각종 현안을 사회운동의 의제로 삼아 항거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재야와 시민사회단체의 인식과

43) ‘5·18민중항쟁 전북행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6년 제26주년부터로 파악된다. 「전북일보」, 2006. 5. 17. “5월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44) 「국민일보」, 2022. 5. 10. “5·18은 광주만이 아닌 전국적 신군부 저지 투쟁이었다.”

45) 2023년 전북의 5·18 의례는 8개 프로그램이었는데, 5개가 희생자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개최 장소는 전북대(4개), 원광대(2개), 전라고(1개), 그리고 광주 답사(1개)였다.

46) 「전북일보」, 1988. 6. 11. “도내도 격렬 시위.”

47) 1989년 6월 10일 개최된 집회와 시위의 의제는 ‘고 이철규 군 고문살인 규명과 평양축전 참가’였다. 「전북일보」, 1989. 6. 11. “4개대생 시위, 평양축전 참가 등 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있던 시군에서도 6·10 의례는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6·10으로 직선제 개헌 등을 성취했으나, 정치와 사회가 기대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10 의례가 전북에서 처음 이루어진 시점은 1990년으로 파악된다. 제3주년을 기념하여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이 전국 13개 도시에서 6월 9일 ‘6월민주항쟁계승국민실천대회’를 열었다. 전북은 익산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저항 의례의 방식이었다. 전주에서 6·10 의례가 열린 시점은 1992년 6월 10일이었고, 6·10 기념식과 민자당 타도 결의대회가 연계되어 있었다. 전주에서는 전북대 학생 1천여 명이 학내와 코아백화점 앞에서 6·10 기념집회를 벌였다.⁴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는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정부 차원에서 6·10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6월민주항쟁기념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⁴⁹⁾ 전북에서도 6·10 의례를 개최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는 ‘6월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참된 민주주의는 아름답다’는 주제로 기념식과 대동제가 펼쳐졌다. 이에 대해 백낙청은 “6월항쟁이 그 역사적 의의에 값하는 기념의 대상이 되지 못한 듯하다”라고 평가했다(백낙청 1997, 13). 전북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같은 맥락의 의례를 개최했다.⁵⁰⁾ 전북의 6·10 의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전북의 주요 도시들은 이후 6·10 의례를 여건에 따라 개최했

48) 「한겨레」, 1992. 6. 11. “전국 6·10항쟁 기념식 민자 집권 저지 결의·단체장 선거 요구.”

49) 「한겨레」, 1993. 6. 11. “6월항쟁 6돌 13개 도시 2만 명 집회.”

50) 「한겨레」, 1997. 6. 10. “6월항쟁 그날 민주함성 되새긴다.” 한편, 6월항쟁 제10주년이 되던 무렵 대학가는 경찰이 한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227명에 대해 1차 검거에 착수하는 등 엄중한 시국이었다. 「경향신문」, 1997. 6. 10. “한총련 극렬시위 2백 27명 검거령.”

으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이 되지 못했다. 이는 6·10 의례는 당면한 사회운동 의제와 저항공동체의 정치적·인식적 다양화 및 분화로 인해 구심과 기억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전북에서 6·10 의례가 크게 주목받았던 시기는 2007년이였다. 전북에서는 3월부터 ‘6월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주와 군산만 참여했다. 전주와 군산의 의례는 5개 영역 1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월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원회 2007). 주요 프로그램은 6월 9~10일 전북도청 야외무대에서 열린 ‘기념식과 시민민주축제’였다.⁵¹⁾ 2008년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와 연계해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서 대행진과 문화제로 개최되었다.⁵²⁾ 이후 6·10 의례가 재개된 시점은 2017년이였다. 30주년을 맞아 전주 객사와 충경로사거리에서 기념식과 민주주의 축제를 열었다.⁵³⁾ 이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라는 정세와 6·10을 재조명하려는 정책적 관심에 따른 효과였다.

전북의 6·10 의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⁴⁾ 2020년에 전국적으로 26개 단체가 기념행사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전북에서는 어떤 단체도 참여하지 않았다.⁵⁵⁾ 전북에서는 6·10 기억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기능하지도 않은 것이다.⁵⁶⁾ 2004년에 창립한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6·10 의례를 주관할 단체라고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까지 휴지기였다. 그러다 2023년에 전북에서 6·10 의례가 개최되었다. 이는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51) 「전북일보」, 2007. 6. 11. “‘민주화 함성’ 6월항쟁 시민축제로 승화.”

52) 「전북일보」, 2008. 6. 10. “‘6·10항쟁’ 맞아 대규모 집회 예정 ... 촛불 ‘교통통제.’”

53) 「전북일보」, 2017. 6. 11. “전주 ‘6월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축제’에 가다.”

5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도자료」, 2018. 6. 7.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5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도자료」, 2020. 6. 25. “전국 26개 민주화운동 단체, 6월민주항쟁 기념주간 선포.”

56) 최인규는 전북은 5·18을 중심으로 기억공동체가 형성되었으나, 6·10을 매개로 한 기억공동체는 형성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17. 7. 25. 권형택 면담)

회 후원을 받아 학술행사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전북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가 연대하여 실현되었다.

2) 항쟁 기념시설의 변화와 특성

전북에서 건립되었던 항쟁 기념시설은 8개 장소에 15개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981년 가장 먼저 건립된 기념시설과 1986~1988년에 건립된 기념시설 3개는 소실되었다. 현존하는 기념시설은 <표 2>와 같이 8개 장소에 11개다. 주제로 보면, 대부분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시설인데, 이세종에 관한 기념시설이 압도적이다. 반면, 엄밀한 의미에서 항쟁 전체의 포괄하는 기념시설은 건립되지 않았다.

<표 2> 항쟁에 관한 전북의 중요 기념시설

명 칭	시 기	장 소	주 체	형 태	기 타
임균수 추모 식수와 목비	1981. 9.	한의원(구) 앞	동료, 선후배	식수, 목비	다음 날 철거
고 리세종 투사 추모비	1985. 5. 18.	전북대 민주광장	전북대학교 민주학생동 지 일동	추모비	1985. 6. 김계 이전
임균수 추모비	1987. 9. 24.	원광대 사회과학대 학 앞	원광대 모교 후배	추모비	법전원 신축, 이전
고 리세종 투사 추모비 (재이전)	1988. 6. 16.	전북대 민주광장	전북민주열 사추모사업 회	추모비	
이세종 광장	1993. 9. 6.	전북대 교정	총학생회	알림판	시계탑
이세종 추모비	2002. 5. 17.	전라고 교정	총동창회	추모비	
故이세종열사표 지석	2002.	전북대 교정	전북대학교	알림석	사망한 터
고 리세종 투사 추모비 (재건립)	2003. 5. 17.	전북대학교 현 위치	5·18전북동지 회, 전라고동 문회, 전북대	추모비	기단석 위에 옛 추모비를

			학교		세움
오이칠정	2012. 5. 27.	신흥고 교정	81회 동문	정자	
5.18민주화운동 표지석	2014. 11. 10.	전주시청 노송광장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표지석	
민주열사 이세종 추모비	2015. 5. 15.	김제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이세종 민주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추모비	조성만 추모비 인접
5.18민주화운동 현장 알림판	2015. 5.	신흥고 옛 교문 터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목판	
5.18민주화운동 현장 표지판	2016. 6.	옛 미원탑 사거리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동판	보도 바닥
故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알림판	2020. 5.	전북대 교정	전북대학교	알림판	

이세종 기념시설은 1985년 5월 18일 전북대 교정에 건립되었다. 이는 1980년대 초반부터 당시 농성자들과 후배들이 합심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였다. 학교 당국은 ‘고 리세종 투사 추모비’ 건립을 제지했고, 한 달여 만에 김제시 월정면 연정리 고향으로 이전되었다.⁵⁷⁾ 5·18에 관한 집합행동이 반정부 행위로 탄압받던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추모비 건립은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컸다. 이 추모비는 5·18을 주제로 건립된 현존 기념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학생들은 철거된 이세종 추모비를 대신해 1986~1988년에 3개의 추모비 혹은 기념시설을 설치해 의례를 개최했다.⁵⁸⁾

57) 이세종 추모비 건립 역사는 1985년 전북대 총학생회장의 증언(2008.)과 「전북대신문」, 2006. 5. 15. “현 이세종 열사 추모비 있기까지.”가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증언을 기준으로 하고, 신문을 참조했다.

58) 이는 2022년 5~6월에 개최된 ‘이세종 열사 추모 사진전’에서 확인된다. 기념시설 명칭은 모두 “고 이세종 열사 추모비”지만, 글씨체와 형태가 다르므로 볼 때 매년 새로 설치

이전한 이세종 추모비를 전북대로 재이전한 시점은 1988년이였다. 그 해 6월 16일 '전북 민주열사 추모사업회'를 창립하고, 김제의 이세종 추모비를 전북대 교정으로 다시 가져왔다.⁵⁹⁾ 현재 추모비는 2003년 5월 17일 2개의 추모비를 결합해 하나로 재건립한 것이다. 이 일은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와 전북대학교 전라고등학교 총동창회가 협력해 진행했다. 추모비는 약력과 추모비 건립 및 이전 과정을 기록한 기단석 위에 설치되었다. 기단석 전면에는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이 일대는 민주광장으로 명명되었고, 2022년 4~5월 120백만원을 들여 새로 단장했다.⁶⁰⁾

이외에도 이세종 기념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건립되었다. 추모비 건립 이후에는 '이세종 광장'이 생겨났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1993년 9월 6일 학생회관 앞 로터리 '시계탑' 일대를 '이세종 광장'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명시했다. '이세종 광장은 80년 5월 민중항쟁 때 최초의 희생자인 우리 학교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는 장소입니다. 이세종 광장을 굽어보며 학우들과 함께 서 있는 이 시계탑은 군부독재의 총칼 아래서도 굽힘 없이 조국을 위해 쓰러져간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애국 전대인의 의지이며 희망입니다.' 2003년에는 표지석이 설치되었고, 2020년에는 표지석 알림판이 부착되었다. 한편, 2002년 5월 17일 전라고 동문들이 학교 교정에 추모비를 건립했으며, 2015년 5월 15일 김제에 민주열사 이세종 추모비가 설립되었다.

임균수의 첫 기념시설은 1981년 원광대 옛 한의관 앞에 「林均壽 追慕植樹」라는 뜻말과 함께 심은 태산목이었다. 이 기념시설은 다음 날 학교 당국에 의해 철거되었다. 이후 한의대 동기들이 오랫동안 기념비 건립을

했음을 알 수 있다.

59) 「전북일보」, 1988. 6. 17. “이세종 군 추모비, 전북대서 이전식.”

60) 「연합뉴스」, 2022. 5. 17. “‘5·18정신 기억하겠습니다’ 이세종 열사 추모 발길.”

준비했다. 그리하여 1987년 7월 건립위원회가 결성되었고, 9월 24일 사회과학대학 앞(현 법학전문대학원 터)에 건립되었다(전북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7, 187~207). 임균수 추모비의 건립은 6·10으로 가능했는데, 이후에도 몇 차례 철거 위기를 넘어야 했다.

5·18 기념시설 주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였다. 특정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5월 신흥고 교정에 건립한 ‘오이칠정’이 첫 사례였다. 오이칠정은 당시 항거를 주도했던 동문이 모임을 결성하고 모금해서 건립했는데, 사회운동 기념시설에서 정자의 형태를 띤 유일한 사례이다. 다음은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기념시설을 설치한 것이었다. 전북지부는 5·18과 관련한 중요 장소들에 기념시설을 조성했다. 첫해인 2014년 11월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노송광장(옛 전주시청 앞)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는 전북 도심에 처음 건립된 사회운동의 기념시설이었다. 2015년 5월에는 고등학생 항쟁을 조명하기 위해 신흥고 옛 교문이 있던 벽에 알림판을 부착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상징적 장소인 옛 미원탑 사거리 보도의 바닥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대비적으로 6·10 기념시설은 전북에 건립되지 않았다. 6·10은 집회와 시위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위 문화가 창출되었고, 그로 인해 각 지역에는 상징적인 거리와 장소가 생겨났다(안병욱 1997, 238).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북도 6·10에 관한 다양한 사건과 상징적 장소 그리고 관련 주체들이 존재하지만, 기념시설 건립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가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에서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했는데, 전북에서는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기억공동체를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북은 6·10 기념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⁶¹⁾

5. 맺음말

5·18과 6·10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했던 사회운동의 역량이 녹아있다. 두 항쟁은 1990년대 중반에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정신을 기리는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희생자가 양산되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고 할 법하다. 두 항쟁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변화와 발전을 추동했고,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두 항쟁에 대한 평가는 큰 편차를 띠며, 두 항쟁의 효과와 파장에 대한 고찰은 신산하다. 항쟁 중심부에 있던 인물들의 심리와 인식은 더 복잡할 터이다. 그러므로 항쟁에 대한 집합 기억은 변화와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기증자라고 할 수 있다.

5·18과 6·10은 전북 사회에 사회운동의 흔적과 유산을 깊게 새겼다. 1980년대 전북의 사회운동은 두 항쟁을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그 유산은 현재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전북의 5·18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았다. 이른바 민주화의 봄에서 전북의 재야와 사회단체는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대중동원이 가능했던 대학가도 조직적 기반이 취약했다. 반면 6·10은 사회운동의 조직력이 상당 정도 구축된 상태였으며, 역량도 성숙해 있었다. 전반적인 인적 관계로 보면, 전북에서 5·18과 6·10은 단절보다는 연속적이었다.⁶²⁾

이러한 차이는 두 항쟁의 전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에서 5·18은 5월 중순까지 몇 차례의 거리 정치로 표출되었는데, 일순간 폭발적인 대중 시위로 변모했다. 따라서 공권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이것은 농성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추동하고 전개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으

61) 「프레시안」, 2021. 8. 9.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이점이 확인된다.

62) 「전북일보」, 2007. 5. 30. “풍물·마당극 문화 역량도 돋보인 시위.”

나, 정작 5월 18일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권력의 탄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고등학생 집단에서 항쟁이 표출되었는데, 종교적 네트워크와 정체성이 작용했다. 6·10에서는 항쟁의 구심을 이루었던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수많은 젊은 사회운동가와 신설 단체가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했다. 특히, 종교시설과 종교인의 역할 및 참여가 커다란 몫을 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전북은 6·10에서 종교계의 역할과 활동력이 높았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거리와 광장의 정치는 대학생의 조직적 역량과 참여가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전북은 6·10과 관련된 수많은 상징적 장소와 공간이 생겨났고, 이들은 이후의 사회운동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의미와 역사의 무게를 더했다.

전북에서 5·18은 지역사회운동을 추동하고 항거를 정당화하는 원천이 되었고, 저항 의례를 통해 상기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했다. 5·18 의례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주기성을 갖고 저항 의례로 표출되었다. 이런 흐름은 국가 차원에서 5·18을 재평가하고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하던 1997~1998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전북에서 5·18 의례는 2000년대부터 추모와 회상을 주제로 하는 몇몇 행사로 수렴해 왔다. 항쟁의 진정성을 반추하고 계승하는 담론도 있었으나, 특정 인물과 사건의 기억과 정체성 유지에 주력했다. 대비적으로 6·10은 의례를 통한 기억과 기념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다. 10년을 계기로 전개된 의례에서는 몇몇 행사들을 중심으로 재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축제의 성격을 띤 문화행사로 치러졌다. 6·10은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변화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 기억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두 항쟁에 관한 전북의 집합 기억은 기념시설에서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항쟁을 주제로 건립된 기념시설은 모두가 5·18에 관한 것이고, 6·10 기념시설은 건립되지 않았다. 5·18 기념시설은 대부분 학교와

공원에 위치하는데, 인물과 장소를 매개로 기념시설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인물로 보면, 이세종에 높은 집중성을 띤다. 이것은 전북의 5·18 기억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지향을 보여준다. 전북 6·10의 특징은 “광주 5월민주화운동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상무대의 고난을 함께했던 세대들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광주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전민항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정리되었다(이재규 2007, 339). 그럼에도 두 항쟁의 집합 기억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두 항쟁 참여자와 기억공동체에 대한 보다 내밀한 관계와 인식을 분석할 때, 드러날 것이다.

(2024년 4월 9일 접수, 5월 13일 심사완료, 5월 23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전북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전북대신문」
-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2008. 《제1차 1980년 5월 전북지역 운동사
구술자료집 : 뜨거운 날들의 투쟁》.
- 5·18기념재단. 2013.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5 : 천주교
편』.
- 5·18기념재단. 2023.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2 : 청소년
편』.
- 강원택. 2015.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김영수. 2018. 『헌법전쟁』. 알렙.
- 김의수. 2002. 「전북지역 학생운동 달라져야 한다」. 『열린전북』 9월호. 35-40.
- 김정원. 2022. 「전북지역 5·18 기억투쟁의 전개 과정과 구성 특징 -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36호. 199-234.
- 김종엽 엮음. 2009. 『87년체제론』. 창비.
- 노영기. 2021. 「전북의 5·18민주화운동」. 『전라도 천년사 편찬의 성과와 의의』.
전북연구원·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1.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선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7. 『6월민주항쟁』. 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9.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월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원회. 2007. 『6월민주항쟁
20년 사업 결과보고서』 제4권.
- 박호성. 2005. 「1980년대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 제도, 의식, 생활의 측면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980년대 한국사회 연구』. 백산서당.
- 백낙청. 1997.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10주년의 의미」.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서중석 외. 2017. 『6월민주항쟁 전개와 의의』. 한울.
- 안병욱. 1997. 「6월민주항쟁의 계승과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역사학연구소. 2007.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 이광철. 2023. 「6월항쟁과 전라북도민주화운동협의회」.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전라북도 학술 포럼 : 인물로 조명한 전북지역의 민주화운동》.
- 이상호. 2007. 『거기 너 있었는가』. 열린숲.
- 이재규. 2007. 「전주-전북지역의 6월항쟁」. 『6월항쟁을 기록하다』 4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전북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2007. 『그대가 있기에 빛이 있었네』.
-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12.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 전주시. 2022. 《전북권 민주화운동기록관 건립 기본구상》.
- 전주신흥고등학교 역사편찬실. 2004. 『신흥학교 120년사 연구』.
- 정근식. 2006. 「항쟁기억의 의례적 재현」.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정철희 외. 2007. 『상징에서 동원으로』. 이학사.

Abstract

Aspects of social movements and collective memory in the
Jeonbuk region

- With Focus on rituals and commemorative facilities related to the
'uprising' of the 1980s -

*Jung, Ho Gi**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ovements in the Jeonbuk region in the 1980s based on the subjects and events, and to examine the aspects of collective memory focusing on rituals and commemorative facilities. The social movements of this study wer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5·18) and People's Uprising of June 10th (6·10), which appeared as 'resistance' beyond temporary collective action and resulted i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Jeonbuk region is where both uprisings took place, but the spotlight on them was insufficient. The two uprisings in Jeonbuk have notabl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events. The subjects of 5·18 were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it unfolded in a state where a resistance

* Visiting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Jeonllabukdo.

community was not well formed. The uprising was expressed through street protests, but the main location was the campus. It was characterized by 2 college student victims, Shinheung high school student protest, and the occurrence of multiple victims. Systematic and well-organized social groups, religious groups, and college student groups played a leading role in 6·10, and there were no victims like those in 5·18. The sense of place of 6·10 was placed on the streets and squares of the city center.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two uprisings were reflected in the aspects of collective memory. The 5·18 rituals began in the mid-1980s with the agenda of remembrance and succession, and were evoked as their trajectories overlapped with social movements, and a memory community was well formed. The core resources of the ritual were focused on victims for decades, and expanded to important events in the 2010s. This work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period, object, and theme of the memorial facilities. The 6·10 rituals were held several times in the nature of a political rally. After the civilian government, it became a small-scale commemorative event. And in the 2000s, it ended up being every 10-year event. The solidarity of the memory community was weak, it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Jeonbuk region is the only region where commemorative facilities related to the 6·10 have not been built. In the Jeonbuk region, 6·10 does not have a high status as a local asset of social movements.

Key words: Social movement, Collective memory,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eople's Uprising of
June 10th, Ritual, Commemorative facility